

110년 일제잔재 청산!

문화유산의 잘못된 토지정보 바로잡기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

추진부서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 031-590-3956



개선배경

- 토지조사사업(1910~1918) 당시 우리 문화유산은 과세 목적과 역사 인식 부족으로 일제에 의하여 일반묘, 일반건축물과 같이 ‘묘지’와 ‘대’로 토지대장 상 등록되었음
 - －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주변 토지와 수행공간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토지를 ‘임야’ 또는 ‘전’ 등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이용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 각종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 호소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 사례]

남양주시에서 유일하게 명승지로 지정된 수종사는 부도 사리장엄구, 팔각오층석탑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로서, 경내 수행공간 등으로 이용 중인 무허가 건축물 및 증축 부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원상복구)처분으로 전통사찰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 관련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21조, 「농지법」 제12조

☞ 잘못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개선내용

개선전

사적 제356호 순강원 : 임야, 대, 묘지
 사적 제360호 휘경원 : 임야, 묘지
 사적 제365호 성 묘 : 묘지
 사적 제366호 안빈묘 : 묘지
 사적 제197호 광 룡 : 묘지, 도로, 임야 등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 임야, 묘지, 대, 구거 등
 사적 제209호 사 룡 : 묘지, 임야, 구거 등
 사적 제363호 광해군묘 : 대, 임야, 묘지
 사적 제367호 영빈묘 : 묘지, 임야, 전

개선후

사적 제356호 순강원 : 사적지
 사적 제360호 휘경원 : 사적지
 사적 제365호 성 묘 : 사적지
 사적 제366호 안빈묘 : 사적지
 사적 제197호 광 룡 : 사적지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 사적지
 사적 제209호 사 룡 : 사적지
 사적 제363호 광해군묘 : 사적지
 사적 제367호 영빈묘 : 사적지

- 토지정보가 “임야” 및 “묘지”로 등록되었던 홍유릉 외 문화재 8개소 “사적지”로 지목 변경 완료
- 국가지정문화재 및 명승지인 수종사 외 5개소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완료

추진과정

「남양주시 문화재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지목변경 지침 수립

- 토지·건축물대장 및 각종 공부 파악
- 문화재청 보유 문화재 관련 자료 의뢰
- 우리기술을 이용 지표면상 GPS좌표 도출 후 드론 촬영 영상 맵핑 작업을 통한 건축물 배치 및 면적 등 현황 조사 및 기록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관련법 시행 이전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관련법령 검토

- 인·허가 여부 검토 및 과거 자료 찾기
-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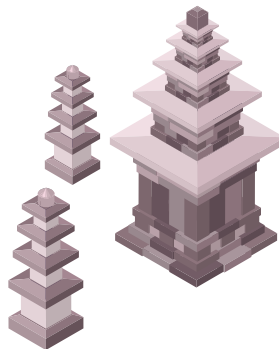
토지이동 정리

- 토지소유자(관리부서)의 토지이동 신청 안내
- 토지이동 신청 서류 검토 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처리



- 비예산 우리기술을 활용 일제가 시행한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및 토지행정의 신뢰성 향상
- 적극행정을 통하여 문화재청 및 종교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어려움 해소

개선효과



남양주시 문화유산 '지목변경'...전국 최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2 23:59 수정 2020.10.13 00:02



드론으로 촬영한 국가지정문화재 휴유동(지목변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토지정보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국가지정문화재 토지정보는 일본제국이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해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돼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통사찰은 국내 고유 전통 및 사찰양식에 따라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인대도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전' 등으로 등록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전통사찰은 각종 규제와 위반사항 등으로 시달림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변경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휴유동 등 9개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각각 변경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전통사찰 수종사(지목변경). 사진제공=남양주시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활용한 실제 이용현황 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명서류 등 자료를 요청해 관련법 저촉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해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했다.

최대집 토지정보과장은 12일 "우리 시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사, 적용했다"며 "이번 적극행정 성과는 국가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자치단체 노력으로 문화유산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올해 9월 '전통사찰 규제 해소와 적극행정'을 높이 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책임자에게는 표창패를 각각 수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경기일보

2021.12.22(수)

잘못된 문화유산 바로잡기 시동...

남양주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추진

최 마지막 기자 seel@kyeonggi.com | 016-11-38-호주 7.25 | 댓글 0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른 토지정보 수두룩



전통마을에 위치한 흥선사

남양주시가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시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20여 개의 문화유산이 있지만, 대부분 열재강점기 당시 강제로 열야 등으로 지정돼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법 규제로 이어지며 보존과 관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관한 지목변경 처리 업무지침'을 수립,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실제 이용현황과 다른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유산 토지정보의 현실화를 기획하다

- 하늘의 눈으로 지적 재정비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양기영 031-590-7311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사업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신 많은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토지정보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경우 우리 고유의 전통과 사찰 양식에 따라 일수문 안부터 경내지임에도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실 지목에 맞춘 토지정보 변경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사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실지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토지대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지적행정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규제개혁은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합리적 법리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과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이 개선·해결될 때마다 공직생활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규제혁신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규제개혁 꿈꾸며 적극행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상의 기쁨! 모두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